



# 보 도 자 료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4층 (www.balance.go.kr)

2021년 7월 7일(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1.7.7(수)	담당부서	총괄기획국 기획조정과
담당과장	태원창(02-2100-1131)	담당자	김경환 전문관(02-2100-1133)

## 제35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개최

- 2022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견 제시 -
-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40건 선정, 총 사업비 6,269억원 규모 -

□ 7월 7일(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제35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안」 등 5건\*을 의결하고 「농산어촌 유토피아 추진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 \* ①「2022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안」,
- ②「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선정안」, ③「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변경안」,
- ④「3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일부변경안」, 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2022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할 때 참고하여야 하는 균형위 의견을 마련·통보하기 위한 것이다.

- 균형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중앙부처 총 506개 사업, 7조 6,911억원의 예산요구서를 사업특성과 검토지표 등에 따른 종합 평가과정을 거쳐, 사업별 편성의견(증액·유지·감액)과 정책제언을 마련하였다.

- 17개 시·도가 신청한 자율계정(시도사업) 116개 사업(8,610억원)에 대하여 증액 22, 유지 92, 감액 2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16개 부처가 요구한 지원계정 184개 사업(6조 822억원)에 대해서는 증액 13, 유지 165, 감액 6의 편성의견을 제출하였다.
- 또한, 자율계정 예산은 감소하는 반면, 지원계정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자율계정 시도사업의 예산 상향 및 신규 사업 발굴, 지원계정사업의 타 회계 이관 필요성, 시도사업 지출한도 배분방식 보완·개선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 향후 정부는 균형위가 통보한 예산편성 의견을 감안하여 「2022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회에 최종 제출(9.3일)할 계획이다.

□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선정안」은 균형위와 행안부 지역균형 뉴딜추진단이 함께 시·군·구를 대상으로 발굴한, 기초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을 포함한 40개 사업(총사업비 6,269억원)을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 균형위에서는 그간 추가사업 발굴을 위해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제공과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를 했고, 수요조사를 받아 전국 7개 권역 65개 시·군·구에 현장컨설팅을 지원했다.
- 추가사업은 79개 시·군·구에서 116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와 소관부처 검토의견, 지역균형뉴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의결안은 부처에 통보하고, 지자체·부처 협의를 거쳐 2022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심사기준) 사업내용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기대효과 등

-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생활인프라·공공서비스 9건**(자연재난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농림·수산 12건**(폐광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에너지 12건**(안동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등), **문화·관광 7건**(섬진강 아트시티 스마트 통합관광 플랫폼 구축 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김사열 위원장은 균형위와 지자체가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지역균형뉴딜사업을 발굴해왔음을 밝히고,
  - 선정된 사업들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실현할 핵심사업'(40개)들로 지역의 디지털경제와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균형위는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변경안」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충북 청주·증평시, 세종시 2개 사업에 발생한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협약변경안이다.

- 충북 청주시의 초정치유마을 조성사업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하였고,
-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은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복합화 시설로 건립하기 위한 부지변경과 사업기간을 연장하였다.

\* 청주·세종 사업기간 2년 연장 : (당초) '19~'21년 → (변경) '19~'23년

\*\* 세종 부지변경 : (당초) 소담동 법원3로 → (변경) 소담동 33-2

□ 「한국전력공사 등 3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일부변경안」은 수도권에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3개\* 공공기관에서, 당초 이전 계획 중 지방이전과 수도권에 잔류하는 인원·시설 등의 변경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심의·의결한 것이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농림수산식품문화원, 게임물관리위원회

□ 「농산어촌 유토피아 추진전략」은 지난 4월초 출범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활동계획이다.

- 우선 '21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포럼·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개발·구체화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체감가능한 성과 홍보에 집중하고자 한다.

- '22년부터는 법령 정비, 신규사업 지원 등 발굴된 정책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경제·사회단체 등과의 협력도 확대하며,
  - 도농 교류 프로그램과 같이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은 지역균형뉴딜정책의 대대적 추진과 같은 정책수요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직개편이다.
  - 초광역협력사업, 지역균형뉴딜정책 추진 강화를 위해 기존 정책 개발실을 광역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지역대학 지원 등 교육분야 업무를 지역혁신국 소관으로 이관하는 등 실·국 소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